

제58회 KISTEP 수요포럼

주 제 : 2017년 한국 경제전망과 시사점
담 당 자 : 윤수진 연구원(T. 02-589-2971)

포럼 종합 요약 및 미래 대응방향 정책제언

2017. 1. 25


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Korea Institute of S&T Evaluation and Planning

1. 개요

- 일 시 : 2017년 1월 25일(수) 10:00~12:00
- 장 소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
- 발표자 :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
- 주 제 : 2017년 한국 경제전망과 시사점
- 토론자 : 홍성범 센터장(과학기술정책연구원), 조현승 본부장(산업연구원), 손종칠 교수(한국외대)

시 간	내 용	비 고
9:30~10:00	인터뷰	YTN 인터뷰(발표자)
10:00~10:05	개회사	박세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
10:05~10:10	발표자 소개	(사회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10:10~10:50 (40분)	주제 발표	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
10:50~11:30 (40분)	패널소개 및 지정 토론	(좌장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(패널) 홍성범 센터장 (과학기술정책연구원) 조현승 본부장 (산업연구원) 손종칠 교수 (한국외대)
11:30~12:00 (30분)	자유 토론	참석자 전원
12:00	폐회	(사회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
2. 발표 주요 내용

- 대외 경제여건으로 미국, 중국, 유럽, 일본을 살펴보면, 특히 제일 중요한 변수인 미국에 대해 중점적 고려 필요
 - (미국)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유지되며, 금리인상,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국제적 불확실성 확대
 - 소비자 지수 개선 등으로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, 물가 인상과 성장률 인상 등으로 인한 금리인상이 예상됨
 -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*는 공급주의 경제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, 이는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임
 - * 자유무역 훼손의도가 아닌, 기업 생산기반을 미국 내에 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, 감세정책 및 자국 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
 - (중국) 고도성장 시기가 끝나고 6%대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, 설비투자 주도의 성장 전략보다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예측됨
 - ※ 중국의 외환보유량은 많은 편이지만, 과도한 설비투자는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음
 - (유로존) 경제성장률이 양호하고 실업률 등 고용지표도 긍정적이나, 북유럽/남유럽의 수준차이가 커 불균형 극복이 유럽의 핵심과제로 남아 있음
 - (일본) 양호한 경기가 지속되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의 극복 없이는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
- 우리나라는 2%의 성장률로 국내 경기가 제자리에 머무르며,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
 - 건설경기와 수출 회복세는 양호하나 경기부양이 가능할 정도는 아니며, 소비부진 등 경기회복의 요인도 부족
 - 생산가능인구 증감률은 경제성장률과 궤를 같이 하므로, 인구구조 문제 해결 없이는 앞으로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
 - 가계부채 확대, 주택 과잉공급, 미국의 금리인상 등은 우리나라 경제의 돌발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, 기업, 개인이 모두 유의해야 함

3. 정책 제언

【 주체별 미래 대응 제언 】

□ 사회 차원

-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일으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,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기회요인도 존재
 - 고령층 인구의 단순한 증가를 넘어 고령층의 질적 변화가 예상되며, 베이비붐 세대*의 은퇴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의 양적 팽창과 고부가가치화 예상
 - *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고령층에 비해 학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하였으므로,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대상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
 - ※ 일본에서도 단카이 세대 은퇴 이후 고령층이 연금을 수령하면서 전체 소비를 주도
 -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고령층이 내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
 -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공급능력 확충과 고부가가치화 필요

□ 국가 차원

- 가계부채 및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시의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
 - 건설경기 확대를 통한 경제부양을 지양하고, 중장기적 제도개혁 및 내수기반의 확충 필요
- 국가차원에서 중국경제 및 중국발 핵심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문제 극복을 위해 중국과의 혁신협력(innovation cooperation)이 요구됨
 -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, 사드 문제, 미국 트럼프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미-중 마찰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

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음

- 따라서 수출 및 고용창출을 통한 활로개척이 필요하며, 1경 규모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로드맵과 혁신의 전 가치사슬에서 협력 필요

※ made for China(중국向 제품)의 방법론으로 made with China 전략

【 과학기술정책 측면에서의 제언】

□ 4차 산업혁명과 실버산업 관련 기술

-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문제가 있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며 생산필요인구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임

※ 기술발전은 생산요소 증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

- 고령층의 소비력 증가로 실버산업의 팽창과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나, 관련 산업 및 기업 기반이 취약하여 개선노력이 필요

- Anti aging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,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도 요구됨

【 법·제도 개선 측면에서의 제언】

□ 재정정책 대응 및 실험적 정책

-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적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적 대응이 긴요하며, 부동산 부양정책 등 단기적 경기부양 조치보다는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

-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,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는 실험적 정책 적용이 요구됨

- 미국, 프랑스와 같은 이민정책 도입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일 수 있으나, 문화적 다양성이 낮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적용 시 사회통합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음

-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북유럽의 제도를 실험적으로 적용하거나,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한 실험적 정책의 적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

